

# 이재명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성장 동력”

### 민주당 대표 신년 회견…“기업 앞장, 국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 열어야” 트럼프 2기 출범엔 “한미동맹,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 중요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은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을 두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주식시장의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영구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한미가) 변함없는 노력과 투자가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비상계열 선포 전으로 돌아간 데 대해서는 “더 나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경고하고 시정하면 되지만, 지켜보신 대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짜뉴스가 무도한 폭력과 계급의 근원이 됐다”며 “이런 문제들은 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계속해서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지금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것 같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려가 크다. 북한을 설득하고 세계 평화에 도움 될 일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 단어조차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법원 폭동 사태는 2차 내란…최상목 입장 밝혀야”

### 국회, 긴급 현안 질의…“전광훈 씨 폭동 배후 가능성 수사 필요”

국회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여야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보인 상대방의 행동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인 행태가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3일 현안질문에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함에 나부터 반성하겠다. 국민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의원은 그러나 곧바로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가 있었나.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낭만까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 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느냐’며 고

성으로 항의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미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2차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불만해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도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진상에 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한선 말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미리 ‘불복하리’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달 26일 공판

### 19일까지 증인신문 마무리…빠르면 3월말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QR code and text: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 국힘 권성동 “지역화폐 추경 불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 공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패륜 정치”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

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 재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작년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지역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감취법”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상품권 살포는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하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며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 필요하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고시 제2025-1호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함)의 글로컬대학 추진과정에 있는 대학들에서 변경요청이 있어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불입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 1. 사업개요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개념) 4년간(2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 (대상규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학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학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광주-전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변경 신청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한 특화지역의 지정변경 신청
  - 신청기관: 광주-전남 지역협력위원회
  - 전담기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 참여대학: 전남대학교 등 광주전남지역혁신사업 15개 참여대학 및 광주보건대학교
    -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산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광주보건대학교
  - 핵심분야: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 지정기간: 지정일 - 4년간

### 2. 규제 특례 요청사항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연립대학 운영 근거 마련	대학경영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의 종류에서 “연립대학” 형태 추가	광주보건대학교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캠퍼스 간 전과 허용	학사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신설, 캠퍼스 간 전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다른 학년(하위 학년)으로 옮기는 것도 허용	광주보건대학교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제외, 시간제 등록제 규제 완화	학생정원	- 시간제 등록생 선발에 교원양성과 및 의료기상학과 제외 규정을 폐지 - 시간제등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인원은 해당 대학 총입학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광주보건대학교
④	「학정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완화, 학정은행제 개선	학사운영	- 신청 → 평가인정 → 학정 → 운영의 과정이 2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단축 및 심사 간소화가 필요 - 교육훈련기간 간 연계한 공동학습자 모집에 금지되어 있어 글로벌 연립대학의 공동 모집, 공동학위제, 교육과정 연계 등 제한이 있어 완화 필요	광주보건대학교
⑤	「학정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정은행제 제도 개선	학사운영	- 학정은행제를 분기별 접수에서 연중 접수로 개선 - 표준교육과정 신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	광주보건대학교
⑥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조항 신장을 통한 전문대학의 대학원 개설 근거 마련	학생 정원	-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전문기술대학원 관련 규정 신설: 대학원,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의 통합,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원의 학위과정, 대학원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광주보건대학교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대상
⑦	전문대학에 보건전문기술사과장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사운영	- 전문기술사과장 신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 신설	광주보건대학교
⑧	전문대학, 전공심화, 전문기술사과장 통합과정 운영 근거 마련	학사운영	- 전문대학에 고학년 마이스터 패스트트랙 제도 개설 및 운영 추진을 위한 전문학사, 학사(전공심화, 전문기술사과장 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규정 개선	광주보건대학교
⑨	「고등교육법」 제44조 전문대학 일반학사 전문학사학위 동시 운영	학사 운영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학위 등을 수여 가능 근거 마련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⑩	「대학설립 운영 규정」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국립대 캠퍼스 활용	대학 경영	국 공립 통합 대학에 한해 지자체 시설 국립대 캠퍼스 허용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⑪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편입학 운영의 자율성 부여	편입학 전형 유형 및 모집원칙 (정원외)	전문학사 학사 교육과정을 동시 운영하는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자가 학사 학위 과정에 편입하는 경우 정원외 모집으로 하고 모집인원은 대학의 정이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비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⑫	대학생 현장실습(제) 운영규정 제30조 4항 3호	학사 운영	대학의 현장실습처 지원금액 상한(회차당 25%) 공공기관 및 출연연은 미적용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⑬	「교육공무원법」 외부 인사 임명 허용	대학 경영	「현재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교원인 임명 가능, 교육공무원법 적용 완화로 전임교원의 외부 인사 임명 허용	국립순천대학교 / 국립목포대학교
⑭	「고등교육법」 비전임교원(65세)에의 부여	대학 경영	비전임교원 정년(65세)을 검증된 인사의 경우 정년기준을 연성하는 예외 부여	국립순천대학교 / 국립목포대학교
⑮	「고등교육법」 겸 초빙교원 공개채용 예외 부여	대학 경영	비전임교원 겸 초빙교원 등 채용시 공개채용 절차가 필수이다. 검증된 인사의 경우 공개채용 예외 부여	국립순천대학교 / 국립목포대학교
⑯	「고등교육법」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 복수학위 운영	학사 운영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 복수학위제도 운영 허용	국립순천대학교
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4 파견근무의 자율성 부여	대학 경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사 운영을 위해 해외사무소에 대학 소속 국가공무원의 파견 및 사법에서 인건비를 지원	국립목포대학교
⑱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청원의 탄력적 운영	대학 경영	국립대학 통합 시 통합후에 공무원 청원을 유연하게 이관 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⑳	국립대학교 하부조직 및 사무국장 업무범위 규제 개선	대학 경영	대학의 하부조직 및 직원의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권한을 대학 총장에게 위임	국립목포대학교

### 3.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

- 제출기간: 2025. 1. 24. ~ 2025. 2. 22.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신청에 따른 규제 특례 추가 적용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제출서 작성 후 서면 제출
- 제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주소: 6118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미래교육관 교육혁신지원팀)
  - E-mail: ispower2002@nu.ac.kr
- 관련문의: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팀(062-530-4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